

김상훈의 세상읽기

BTS노믹스, 지역경제 활력…도 넘은 상술 ‘흙’



주필

#1.  
‘스위프트노믹스(Swiftonomics)’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름과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가 결합한 신조어다.  
그녀의 투어 콘서트가 교통·숙박·식음료 등 서비스업 수요를 급등시켜 일시적 경제 부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2006년 데뷔한 그녀는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앨범상’을 세 차례, 최고 권위와 공신력을 인정받는 차트인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만 12번, 전 세계에서 2억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한 세계적인 슈퍼스타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미국을 순회하며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를 했는데 이 공연이 단순 문화 이벤트를 넘어 하나의 경제 현상이 됐다.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약 20여개 도시에서 한 공연으로 교통, 숙박, 식음료 소비까지 포함한 총 경제 효과가 무려 50억달러, 한화(환율 1450원 적용)로 약 7조2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단일 아티스트 투어가 대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지역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그녀의 필라델피아 공연 덕분에 호텔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300개의 일자리와 1억

6000만달러의 지역 소비가 창출됐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또 2023년 10월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 ‘테일러 스위프트:디 에라스 투어’도 전 세계에 개봉돼 월박스오피스 2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공연 영화 중 최대 수익을 올렸다. 그녀의 영향력이 음악 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의 ‘스위프트 리프트(Swift lift)’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2.  
이에 못지 않는 ‘BTS 노믹스(BTS+Economics)’도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팬 플랫폼에 월드투어 재개 소식을 알리면서 공연 일정이 공개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항공권과 숙박 예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투어는 202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이후 약 4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오는 4월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북미·유럽·남미·아시아 등 34개 도시에서 총 79회 공연이 예정돼 있다.  
BTS는 2022년 월드투어 당시 도시 전체를 공연과 연계한 ‘더 시티’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콘서트를 중심으로 도시 곳곳에서 전시·이벤트·테마 공간을 운영하고, 숙박·교통·외식·관광·굿즈 소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공연장을 넘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확장한 이 모델은 글로벌 투어가 지역 경제와 문화 전반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다.  
BTS의 글로벌 투어가 만들어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BBC는 빌보드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45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연 수익뿐 아니라 음반·스트리밍·MD·라이선싱 매출 등을 모두 포함한 추산치로, 이전 투

어 대비 크게 확대된 규모다.  
여행·관광 업계에서는 ‘라이브 투어리즘’을 촉발하는 대표적 아티스트인 BTS 투어가 도시·항공·숙박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려 콘서트 자체를 여행의 핵심 목적으로 만드는 흐름을 가속화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BTS 콘서트 1회당 경제 효과를 최소 6197억원에서 최대 1조2207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3.  
문제는 여기에 편승한 도 넘은 바가지상술이다.  
6월 12~13일 공연이 확정된 부산의 경우 벌써부터 숙박업소의 압제 요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모텔부터 호텔·콘도까지 곳곳에서 숙박료가 최대 수십 배 치솟은 것이다. 평소 10만원대인 숙박 요금이 70만원대로, 일부 업소는 1~200만원까지 숙박료를 책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부 업소는 더 많은 요금을 받기 위해 기존 예약까지 취소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십건의 바가지요금 신고가 한국관광공사에 운영되는 큐알(QR)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린 데 이어 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고 나설 정도다.  
물론 큰 행사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한탕주의식 숙박비 폭등 사태는 결국 바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외국인과 관광객이 등지는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BTS 노믹스가 지역과 관광객이 모두 상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과 업소들의 자정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

정부 통근 결단 ‘전남 의대’ 설립 앞당겨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2027년 대학입시부터 비서울권 의과대에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 전형은 의과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로 별도 선발하는 데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광주, 대전·충남 등 9개 권역 32개 대학이 대상이다. 광주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포함됐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등록금·교재비·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대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광주·전남권의 경우 의무복무지역이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대도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해당 권역 고교 출신이 이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졸업 후 자신의 권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즉, 순천 출신 학생이 이들 의대에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면, 졸업 후 순천권인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예기다.  
물론 이도 좋지만 정작 전남도민들의 숙원인 전남 국립의과대학의 개교 시점이 2030년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동안 전남도가 목표로 했던 2027년도 의대 신설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전남 국립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인 공공의료사관학교를 2030년부터 100명씩 신입생을 뽑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 경우 섬과 산간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상황에서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을 전전하고 있는 전남의 안타까운 현실은 앞으로 10년 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월 배경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런 의료 현장을 감안해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한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다.  
전남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 자치구 지역화폐 올해도 발행된다

광주 남구 지역화폐 ‘남구동행카드’가 올해도 이어진다.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인데 남구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각각 40억원씩 총 80억원 규모로 발행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50억원 증액된 액수다.  
여기에는 이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꾀하고, 골목 경제에 신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지난해 첫 판매한 동행카드가 빠르게 소진되며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상반기엔 설 명절을 앞둔 26일부터, 하반기엔 추석 전인 9월 초순에 발행하며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등 3종류로 광주은행·광주시 모든 영업점에서 판매된다. 동행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남구에서 지원하는 10% 할인 혜택과 정부차원은 5% 할인 등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실 지역화폐는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가 앞다퉈 내놓을 정도로 선풍적 인기였다. 20% 가까운 할인율 덕분에 구매율이 뜨거워 출시되자마자 품절대란이 빚어졌다.  
실제로 광주 동구와 남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각각 50억원, 3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18%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북구와 광산구도 지난해 11월 할인율이 18%~20%에 이르는 ‘부끄러머니’와 ‘광산사랑 상품권’을 각각 1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이들 지역화폐는 한 달도 채 안가고 모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유일하게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은 서구는 관내 상점가 전체를 ‘골목형상장가’로 지정해 은누리 상품권의 10% 할인 혜택과 매달 10% 할인 혜택을 추가하는 이벤트를 열어 20% 가까운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광주 자치구들이 지역화폐 발행에 ‘울인’하는 것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카드로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줘 사실상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만드는 등 지역 내 순환 경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치구 예산 부담, 반쪽 경제활성화 등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올해도 지역경제가 어려워 지역화폐가 대세가 될 전망이다.

기고

진로·진학 시제는 행정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점권

광주진로진학지원단장  
설월여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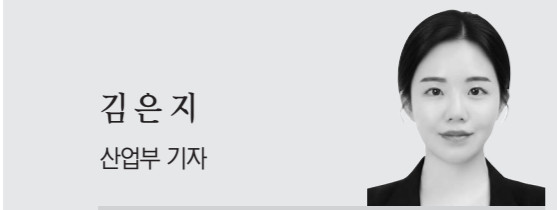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역사적, 정서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행정통합 논의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행정통합의 흐름 속에서 교육청 통합까지 함께 추진하려는 움직임에는 분명히 우려가 따른다. 교육은 행정 효율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영역이다. 특히 학생의 진로와 진학은 단기간의 제도 변화로 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교 3년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 과목 선택, 학생평가, 진학 상담은 학교 현장에서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체계로 축적되어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학생 개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남는다. 그러기에 교육만큼은 행정통합의 일정과 분리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청 통합 논의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의 본질은 학생 선택권 보장이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은 학교 밀집도와 교원 수급, 이동 거리와 생활 여건 등에서 뚜렷한 구조적 차이를 지닌다. 지역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

지 않은 채 광역 단위의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선택권의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은 각자의 교육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축적해 왔다. 광주는 진로와 진학 중심의 입시 지원 체계를, 전남은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을 고려한 돌봄과 진로교육 연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교육 자산은 분리된 체제 속에서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교화되어 왔다. 통합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만이 강조된다면, 이러한 자산은 충분히 활용되기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행정의 현상 밀착성 악화 또한 우려되는 지점이다. 교육행정의 질은 접근성과 즉시성에서 비롯된다. 행정 단위가 커질수록 의사결정 구조는 복잡해지고 이는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현재 광주에서 교육청 본청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평가 관리 체계가 지역교육청 단위로 분산될 경우,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 평가는 대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 체계의 작은 혼선 하나도 현장에서는 곧바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교육은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통합 논의와 별개로 교육은 학생의 학습 연속성과 제도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교육청 통합을 유보하고,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체제 속에서 고교학점제 운영과 학생평가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동시에 두 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기준으로 한 협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체계를 준비하는 게 순서이다.  
행정통합 논의가 계속되더라도 교육만큼은 분리된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과 검증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두 교육청은 교육청 통합 여부를 행정통합의 부속 사안으로 다루기보다는 고교학점제 운영 안정화와 학생평가 체계의 일관성, 진로진학 지원의 연속성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광역 단위 통합이 학생 선택권과 교육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분리된 교육체제 속에서 각 지역의 교육 여건을 존중하고 협력 모델을 차근차근 구축해 가는 과정이다. 이는 통합을 거부하는 선택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유보이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무다. 진로와 진학의 시제는 행정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교육 정책은 언제나 한 발 늦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길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 정책의 성과와 실패는 통계가 아니라, 교실 안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으로 남기 때문이다.

취재수첩

AI 시대 속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



김 은 지  
산업부 기자

AI 기술은 이제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인간의 선택과 경험 자체를 다시 그리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미래 기술이 아닌,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든 존재가 된 것이다.  
검색과 번역을 넘어, 업무 방식과 소비 경험, 의사결정 과정까지 AI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산업 현장에서도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에는 사람의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하던 영역을 마저 이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가의 설명을 따라 결정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비교하고 이해하며 선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물론 모든 변화가 즉각적인 편리함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긴다.  
익숙했던 방식이 달라지고, 새로운 기준을 이해해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AI가 산업과 사회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AI는 만능 해답이 아니라 도구에 가깝다.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기준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결국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며, AI의 가치는 이를 사용하는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AI는 선택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속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 상태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  
AI가 바꾸는 세상은 이미 시작됐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랬던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준비가 먼저 앞서야 한다.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정영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월 실 370-7000			
	사 회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신 외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문 집 부 370-7082	독자경영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